

간협 “준법투쟁 간호사 부당해고 등” 고발

간호협회,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불법의료행위 실명신고된 병원급 359곳 부당해고 4명·사직권고 13명 등 불이익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홈페이지 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 신고의 경우 비밀명 대리신고 자문번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벌인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방문하고,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간호사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병원의 실명을 리스트로 갖고 있다”며 “모두 고발하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도록 한 의사와 해당법인의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경찰청에 고발하고 빠른 시일 내 고소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불법의료 행위 신고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분할·관절강 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조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 신고를 받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에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등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같은 기간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 13명으로 집계됐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문위원은 “부서이동 전 간호부서를 통해 간호사에게 로테이션 의향을 묻고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병원이 간호사들을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를 다른 진료과로 바로 로테이션 시켰다”면서 “간호사가 밤 근무 때 약사나 임상병리사 업무도 많이 하는데, 이를 거부했다가 근무표에 갑자기 낮근무로 배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으로부터 겁박을 당했다는 신고도 많았다”면서 “현장에서 왕따를 시킨다던지(집단에서 개인을 배제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형성해 준법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했다.

최 전문위원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며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싶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체열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라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체열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간협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에 비밀명 대리신고 자문번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다.

간협은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불법 의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복지부장·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도 요구하기로 했다.

최 전문위원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인 지 한 달이 되는 16일 반납된 면허증을 모아서 복지부를 향한 방문하고 윤 대통령에게 장관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나기자



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나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이송으로 구슬땀 흘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주말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시도 인사고료 소방공무원 임용식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서장실에서 시도 인사고료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소방, 지역농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최근 16일날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소방,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2차 전지, 전략과 미래특별강연 개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광양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전지, 전략과 미래’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하는 녹색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녹색연합 관계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녀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 다음달 부터 항소심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승합차 기사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및 1심 주장과 같이 성관계가 실제로 없었으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사모일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

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 27일 선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뉴스